

# 蘇聯의 對北韓 政治的 影響力 行使에 관한 研究\*

—根據와 實際—

진 홍 환

본 논문은 북한에 대한 소련의 정치적 영향력을 분석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실제로 소련이 북한에 대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객관적인 물질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가? 가지고 있다면, 양국 관계에서 소련이 북한에 대하여 그러한 영향력을 실제로 행사하고 있는가? 또한 그러한 영향력 행사가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양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 세 가지 문제가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핵심 과제이다.

본 연구는 시기적으로 1985년 고르바초프 집권 이후 상황에 초점을 맞춘다. 그 이유는 본 주제의 중요성이 고르바초프 집권 이후 새로이 설정된 소련의 對 동북 아시아 및 한반도 정책의 맥락에서 특히 부각되기 때문이다. 동북 아시아 지역에서 새로운 국제 질서의 형성을 구상하고 있는 고르바초프 정부는 이에 부합하는 북한의 정책 변화를 희망하게 되었고, 이를 거부하는 북한에 대하여 소련이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하는가라는 문제는 그러한 맥락에서 특별한 중요성을 띠는 것이다.

고르바초프 집권 이후 상황에 초점을 둔 본 연구는 한국정부의 「北方政策」(특히 對蘇政策)이 상징하고 있는 정치적 목표의 실효성을 검증해 본다는 의미도 함께 가진다. 현재 한국 정부가 북방정책의 한 핵심 부분으로서 추진해 온 소련과의 관계 개선 정책은 그 근저에 소련과의 관계 정상화를 통하여 북한으로 하여금 한반도에서의 평화 공존 체제를 수용하도록 유도한다는 장기적인 정치적 의도가 강하게 깔려있다.<sup>1)</sup> 즉, 다방면에 걸친 한-소 협력 관계의 증진은 결국 소련으로 하여금 한반도의 평화 정착에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갖게 할 것이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소련·동구연구소 대우연구비의 지원을 받은 연구임.

1) 대한민국 외무부, 국외 보고 자료(東歐), 北方外交의 現況과 推進方向(第146回 臨時國會 外務統一委員會) (1989년 5월), p. 3.

고, 이는 더 나아가서 북한의 내남허명적 통일 정책을 포기하도록 소련이 북한 당국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판단은 소련의 북한에 대한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일종의 기성사실로 가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바로 이러한 가정이 객관적인 근거에 기반한 것인가를 실증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하여 보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북한에 대한 소련의 정치적 영향력 행사 문제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그러한 영향력을 가능하게 하는 객관적인 기반이 존재하는가를 판단하는 문제는, 북한이 소련에 대하여 경제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어느 정도의 의존성(dependence)을 가지는가를 바탕으로 분석한다. 그 다음에 그러한 객관적 기반이 존재한다면(즉, 소련에 대한 북한의 의존도가 상당한 수준이라면), 실제로 고르바초프 집권 이후 소련이 실제로 북한의 정책 변화를 위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가를 알아 본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의 결론으로서 소련의 영향력 행사가 어떠한 양상(pattern)으로 전개되어 왔는지를 정리한다.

## 1. 북한의 대소 의존성 : 경제와 군사

### 1. 경제적 의존성

가장 대표적인 의존성은 경제적 측면에 있어서 발견할 수 있다. 즉, 현재 북한 경제의 운영에 있어서 소련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가라는 측면이다. 북한의 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 소련은 북한에게 가장 중요한 경제 원조 제공자였을 뿐만 아니라 무역파트너였고, 지금도 북한 산업의 운영에 핵심적인 원자재 및 설비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북한에는 소련에 의해서 건설된 70여개의 대규모 공업 생산 및 기간산업 시설이 있으며, 이는 북한 경제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다. 바로 이 시설들이 북한 전체에서 생산되는 電力의 약 63%, 석유화학제품의 약 50%, 알루미늄의 100%, 철강의 40%이상, 의복의 약 20%를 생산하고 있다.<sup>2)</sup> 따라서 북한 경제의 근간을 형성하는 이들 산업 시설들의 운영은 여전히 상당부분 소련의 기술 및 부품 공급에 의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대외 무역 역시 상당한 대소 의존도를 보이고 있다. 고르바초프 집권

2) Moscow 국제 방송(한국어), 1989년 3월 12일. FBIS-SOV-89-049, p.20에서 재引用. *Pravda*, 3월 17일자, p.6.

〈표 1〉 북한의 대외 무역에 있어서 소련과 중국의 비중 (단위: %)<sup>3)</sup>

年 度	1985	1986	1987	1988	1989
蘇 聯	42.6	51.0	48.8	50.3	49.9
中 國	16.6	15.4	12.4	11.1	11.7

이후 시기에서 북한의 전체 대외 무역량 가운데 소련이 차지하는 비중은 〈표 1〉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약 50%라는 엄청난 수준이다. 북한의 대외 무역에서 소련 다음의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이 불과 10~15% 정도 밖에 차지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북한의 무역 상대국으로서 소련의 압도적인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다.

북한의 대소 무역 의존도는 수출 보다 수입 측면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1988년 기준으로 북한의 전체 수출 가운데 43.8%가 소련으로 보내어지고, 수입 물량 가운데 54.5%가 소련으로부터 반입된다.<sup>4)</sup> 이에 비해 소련의 대북한 무역 의존도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 1988년 기준으로 소련의 대북한 수출 및 수입 의존도는 각각 1.5%와 0.8%에 불과하다.<sup>5)</sup> 따라서 무역에 관련한 소련-북한 관계는 상호의존적(interdependent)인 관계가 아니라, 철저히 소련에 대한 북한의 의존성(dependence)이 두드러지는 관계이다. 수입 측면에 있어서 소련의 중요성은 그러한 수치 이외에도, 수입의 내용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즉, 소련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의 주종은 소비재가 아니라 석유 및 석유제품, 기계 및 운송장비, 고체연료, 선철, 강, 압연품 및 생산공장 설비 등으로서, 이들은 북한의 공업 생산 활동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품목들이라는 것이다.<sup>6)</sup> 더구나 그러한 산업 원자재들을 소련은 지금까지 국제 시장 가격에 훨씬 미달되는 가격("friendship price")으로 제공하여 왔다. 따라서 핵심 산업 원자재의 저렴한 공급자로서 소련의 존재는 북한 산업의 운영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더우기, 핵심적인 산업 원자재들의 저렴한 공급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외 무역은 최근 심각한 역조 현상을 보이고 있다(표 2). 이러한 대소 무역 역조의 심화는 북한에 대한 소련의 저렴한 산업 원자재 수출 가격을 고려한다면, 북한

3) 北韓 및 周邊政勢動向(平壤조 90 13-14)(統一院, 1990), p. 208.

4) 上掲書, pp. 309-310.

5) 출처: Vneshnie Ekonomicheskie Svyazi SSSR (Moscow, 1988), p. 8, 11.

6) 上掲書, p. 304.

〈표 2〉 북한의 대소 무역 실적(1980~88)<sup>7)</sup> (단위: \$ mil.)

年 度	輸 出	輸 入	總 額	收 支
1980	412	417	829	-5
1981	358	390	757	-41
1982	510	448	958	62
1983	438	354	792	84
1984	448	425	873	23
1985	573	648	1,221	-75
1986	620	1,060	1,690	-430
1987	680	1,270	1,950	-590
1988	890	1,740	2,630	-850

경제의 심각한 대소 의존도를 말해 준다고 할 수 있다.

## 2. 군사적 의존성

이처럼 경제적 측면 이상으로 북한이 소련에 대하여 높은 의존도를 가지고 있는 영역은 군사적 측면이다. 소련은 북한에 대한 최대의 군사 원조 제공 국가로서, 그 규모는 한국전쟁 이후 1980년까지 약 18억불에 달한다. 이는 중국의 대북한 군사 원조 총액인 약 6억불의 세배가 넘는 규모인 만큼, 중국에 비교하여서도 월등히 많은 군사 원조를 제공한 셈이다.<sup>8)</sup>

역사적으로 북한은 중국과 소련 사이에서 시기에 따라서는 외교적으로 소련보다 중국과 보다 밀착된 관계를 형성하기도 하였고, 또 무기 제공을 둘러싸고 소련과 상당한 마찰을 빚은 경우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무기 구매에 관한 한 거의 진적으로 소련에 의존하여 왔다. 그간 대표적인 소련의 대북한 무기 및 군사 장비 제공 사례는 다음과 같다. 북한 정부 수립 이후 1950년의 한국 전쟁 준비 기간 동안 북한군은 무기와 탄약 등 군수품을 다량 소련에서 수입하여, 당시 소련-북한 무역의 3분의 1이 군사 장비였을 정도였다. 또한 월남전쟁 당시 미국의 월맹 폭격에 충격을 받은 金日成은 북한의 방공 체재 개선을 위해 소련에 최신행 군사 장비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했으며, 소련은 그러한 요청을 받아들여 1965~70년 사이에 지대공 미사일, 고성능 전자 장비, 전투기들을 제공함으로써 북한 스스로 적어도 공중 공격을 저지시킬 수 있도록

7) *Vneshnaya Torgovlya SSSR* (Moscow, 매년호)에서 계산.

8) 柳錫烈, 蘇-北韓關係의 現況과 展望(외무부 외교안보 연구원, 경제 연구 시리즈 90-06), p. 56.

했다. 이외에도 같은 기간 동안 소련은 한반도에서 미국 세력을 견제하기 위하여 소련의 최신행 근사중장비, 즉 잠수함, T-54/T-55 탱크, 미사일 함정, 대 이다 등을 북한의 요청과는 별도로 제공하였다. 뿐만 아니라 소련은 북한에 있는 14개의 지대공 미사일 기지를 35개로 늘렸으며, 총 210개의 미사일 반사기를 보유시켰다. 이후 한때 소련-북한 관계가 다소 냉각기를 겪었으나, 1970년대 중반에 가서 다시 소련은 Su-7 전폭기와 T-62 탱크 등 다량의 전술 무기를 북한에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그 동안 소련은 사실, 쿠에블로호 사건, EC-121기 격추사건 등에서 나타난 바와 같은 북한의 호전적이고 도취주의적인 군사 행동 경향을 반대하고 우려하여 북한에 대하여 고성능 공격 무기들은 제공하기를 자제해 왔었다. 그러나 1984년에 金日成이 23년만에 처음으로 소련을 방문하여 당시 체르넨코 서기장과 회담을 한 이후, 소련은 북한에 대하여 그사이 제공하기를 거부했던 Mig-23기를 1~2년 사이에 20~30대 공급하기로 하였다. 그러한 답판은 고르바초프 집권 이후 1986년 10월에 金日成이 다시 소련을 방문했을 때 재현되어 이후 Mig-29, Su-25기, Scud-B 미사일 등의 첨단 무기들을 제공받게 되었다.<sup>9)</sup>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북한군의 무기 및 군수품들의 도입은 우선 물량면에 있어서 거의 소련에 의지해 왔다. 뿐만 아니라, 무기 체제 자체가 소련제 일변도로 조직됨에 따라서 그러한 무기 체제를 유지하는 데에는 소련으로부터의 부품 제공이 필수적이게 되었다. 바로 이 점이 군사적인 측면에서 북한의 대소 의존도를 높이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소련에 대한 북한의 군사적 의존성은 무기의 물량과 편제에서 뿐만 아니라 전술적 기술적 측면에서도 눈에 띈다. 첫째, 북한군은 고차원의 군사 훈련 및 교육의 상당 부분을 소련에 의존하고 있다. 북한의 공군 조종사들과 군사 정보 요원들이 소련에서 훈련을 받는 것이라든지, 두브나 핵융합 연구소에서 북한 군수 산업에 종사하는 과학자들이 핵무기 제조 기술을 연수받는 것이 대표적인 그러한 예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남한에 대한 군사 정보 역시 북한군은 상당 부분을 소련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예로서 북한은 소련 공군의 고공 정찰기들에게 북한의 영공 통과와 공군 기지 사용은 허용함으로써 북한군 스스로는 포착할 수 없는 남한에 관한 군사 정보를 소련으로부터 제공받고 있다. 셋째, 작전면에서도 양국은 상당한 협조 체제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9) 上揭註, pp. 52-55에서 발췌.

보인다. 이 점은 특히 해군 영역에서 두드러진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1986년 이후 동해상에서 소련의 태평양 함대와 북한의 해군이 정기적인 합동 군사훈련을 개최함으로써 긴밀한 작전 협조 체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소련의 태평양 함대 함정들과 북한의 해군 함정들이 빈번히 상호 해군기지를 방문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1983년 6월 이후 북한이 나진항을 소련의 베트남, 캄푸체아 등 태평양 국가들에 대한 통과화물 전진 기지로서 사용권을 소련에 양도한 것 등도 그러한 예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은 북한군이 무기라는 하드웨어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기술적 혹은 전술적인 소프트웨어 차원에서도 소련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와같이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북한은 소련에 거의 절대적인 수준의 의존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서, 소련이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북한에 대한 협조를 중단한다면 북한의 경제와 군대는 절대적인 위기를 맞게 되는 입장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소련의 입장에서는 북한과의 협조 제제의 중단이 큰 분재를 야기하지 않을 불균형 위치에 있다. 바로 이 점이 소련-북한 간의 관계가 상호의존(interdependent) 관계가 아니라 소련에 대한 북한의 일방적인 의존관계(dependent)임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고르바초프 집권 이후 북한의 정책 변화를 희망하는 소련 정부가 과연 그러한 재관적 영향력 기반을 실제로 행사해 왔는가분 다음에서 살펴 본다.

## II. 영향력 행사의 실제

### 1. 고르바초프의 對北韓 정책 : 기본 방향

고르바초프가 새로운 외교 정책 개념으로 제시한 「新思考」에 따라, 소련은 1986년경 부터 동북 아시아 지역에 대한 새로운 정책 구도를 제시하였다.<sup>10)</sup> 소련 자신이 아시아-태평양 국가임을 강조하면서, 특히 동북 아시아 지역에서 소련을 포함한 모든 지역 국가들이 참여하는 집단 안보 체제와 경제 협력 체제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기 시작하였다. 그러한 장기적인 목표에 따라 소련은 동북

10) 1986년을 기점으로 삼은 것은 그해 7월 고르바초프가 행한 「블라디보스톡 연설」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 연설에서 그는 소련이 체제와 이념의 차이를 초월하여 동아시아 국가들과 적극적인 관계 개선을 희망한다는 뜻을 분명히 하였다. 동북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르바초프는 1988년 9월의 이른바 「크라스노야르스크 연설」에서 안보와 경제 협력에 관한 일련의 정책들을 제시하였다.

아시아 지역의 대표적인 적대 국가 혹은 경쟁 국가이던 중국과 관계 개선을 서둘렀고, 이어서 지금까지 북한 지지 일변도이던 한반도 정책을 수정하여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착수하였다.

그 가운데 한국과의 관계 개선은 또한 소련의 전체적인 제 3세계 정책의 변화에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고르바초프 집권 이후 소련은 종래의 사회주의 국가 혹은 사회주의 혁명 집단 중심의 제 3세계 정책에서 탈피하여, 보다 발달된 경제력을 가진 제 3세계의 자본주의 체제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이는 소련이 제 3세계 정책의 주요 목표를 사회주의 혁명을 지원하는 것에서 탈피하여 이데올로기보다는 실익 위주로 전환한다는 의미였다. 1970년대 중반 이후 본격화된 사회주의 혁명 지원 위주의 제 3세계 정책은 1980년대에 들어서 소련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기 시작하였다. 우선 막대한 경제적 군사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소련이 지원한 사회주의 국가들은 경제적 정치적 안정을 이룩하는 데에 실패하고 오히려 끊임없는 내란에 시달리면서 소련의 재정만 기약없이 소모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앙골라, 이니오피아, 모잠비크, 니카라과, 아프가니스탄이 그 대표적인 예였다. 따라서 고르바초프 집권 이후부터는 제 3세계 정책의 일대 전환을 추구하여, 이데올로기적 제약 없이 실리적으로 소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국가들과 유대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 되었다.<sup>11)</sup>

한편으로는 이러한 제 3세계 정책의 전체적인 변화라는 맥락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동북 아시아 지역에서 새로운 국제 질서를 형성하려는 구상하에, 고르바초프 정부는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급속도로 발전시킬 수 있었다. 물론 여기에는 그러한 소련의 정책 변화가 한국 정부의 「北方政策」 추진과 시기적으로 일치했던 특수한 상황도 작용하였다. 그 결과 양국은 1990년 6월 샌프란시스코에서의 1차 정상 회담에 이어 그해 9월에 국교를 수립하기에 이르렀다. 정부 차원의 공식 관계 뿐만 아니라 경제 교류 또한 상당한 양적 증가를 기록하여 양국의 무역 규모가 1986년도에는 3억弗이던 것이 1989년에는 6억弗로 늘어났고, 1991년에는 15억弗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러한 동북 아시아 및 한국에 대한 고르바초프의 정책 목표는 소련의 대북한

11) 이러한 맥락에서 고르바초프 집권 이후 소련은 브라질, 아르헨티나, 아세안(ASEAN) 국가들, 쿠웨이트 등 페르시아灣의 부강 선유국들, 이스라엘 등과 관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반면에 기존의 사회주의 우방 국가들에 대한 원조 그리고 기타 분쟁 지역에서 사회주의 혁명 세력에 대한 지원은 점차 축소하기 시작하였다.

정책에 있어서 어떠한 변화를 요구하는가? 무엇보다도 소련은 동북 아시아에 있어서 새로운 국제 질서를 창출하는 것을 장기적인 정책 목표로 삼고 있음은 앞서 지적한 바이다. 그 새로운 국제 질서란 궁극적으로 東歐의 붕괴 후 유럽에서 구체화되고 있는 집단 안전 보장 체제(즉 CSCE)와 같은 기구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배경에는 소련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이 군사력 증강을 위주로 한 안보 정책을 지양하고, 그 대신 안보 정책의 주안점을 안정된 국제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둔다는 이른바「新思考」개념이 작용하고 있다. 바로 그「新思考」의 핵심은 지역 국가들이 이데올로기를 초월하여 共榮을 위한 협조관계를 증진시켜 나간다는 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협조적인 국제 질서의 핵심 구조로서 국가 간의 분쟁을 정치외교적 협상과 조정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집단 안전 보장 체제를, 유럽에서와 마찬가지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도 형성한다는 것이다.

그것을 위한 첫 단계로서 고르바초프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중에서도 긴장과 군사적 대결 구조가 가장 강하게 남아 있는 동북 아시아 지역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동북 아시아 지역의 안정화는 지역 국가들간의 적대 관계 해소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앞서 지적한 대로, 소련은 중국과의 화해,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일차적으로 서둘러 왔다. 이를 위하여 또 한가지 해결해야 할 중요 문제는 한반도에서의 평화 정착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소련이 원하는 북한의 변화는 내부적으로는 교조주의적인 폐쇄 체제를 청산하고, 대외적으로는 혁명 지향적 통일 정책을 포기하여 남한과의 평화 공존을 받아들이는 한편, 개방을 통하여 지역 국가들과의 교류를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이다. 바로 북한의 이러한 변화 없이는 한반도에서의 평화 정착이 불가능하고, 따라서 동북 아시아에서 소련이 희망하는 새로운 국제 질서는 형성될 수 없다는 것이 소련 지도층의 인식이다. 이렇게 볼 때 소련은 동북 아시아와 더 나아가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新思考」에 입각한 새로운 국제 질서를 성공적으로 창출하기 위해서는, 그에 부합하는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유도해야 할 정책적 필요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2. 소련 언론과 학계의 北韓 인식 변화

이러한 소련의 동북 아시아와 한국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 노선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1985년 고르바초프 집권 후 소련의 북한 정책은 적어도 1987년까지는



두드러진 변화가 없었다. 양국은 여전히 공식 방문단을 상당한 빈도로 교환하였고, 회담들 역시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예를 들어, 1985년 11월에 소련은 북한에 대하여 핵 발전소 건설에 소요되는 시료용 경제 원조를 약속하였으며, 그해 말 북한의 부총리 姜成山이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1986~90년 간의 양국 간 무역 규모를 1981~85년 간의 두배 이상 증가시키는 데에 합의하였고, 그 합의는 소련 언론에서 “양국의 경제 협력의 발전에 획기적인 시기”라고까지 표현되었다. 1986년에는 코르바초프의 「불라디보스톡 연설」이 있을 후 10월에 金日成이 불과 2년만에 다시 적십 소련을 방문하였다. 그 당시 金日成은 코르바초프에게 케레스트로이카 뿐만 아니라 「불라디보스톡 연설」에 내히어 절대적인 지지를 표명하였고, 소련-북한간에 지속되고 있는 우호적 관계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소련 인민들은 현재 소련에서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이념적 변혁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현재 소련 인민들이 경제 발전을 위한 성공을 거두기를 희망한다.… 양국 인민들 간의 우호 협력 관계는 최근 새로운 수평으로 발전하여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등 여러 방면에 걸쳐서 확장임에 있다.<sup>12)</sup>

金日成의 1986년 소련 방문은 소련-북한 관계를 공고화하는 데에 중요한 기록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 이후 양국의 고위급 실무자들은 양국 정상 간에 합의된 내용들을 실행하기 위하여 일련의 회담을 여러 방면에 걸쳐서 개최하였다. 또한 그 동안 소련이 북한에게 제공하기로 꺼려하던 Mig-29, Su 25 등의 고성능 무기들이 북한으로 속속 들어온 것 역시 그 이후의 일이었다.<sup>13)</sup>

이러한 표현상의 우호성 유지에도 불구하고 1987년에 이르러 소련-북한 관계에는 한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변화의 조짐이 있었다. 그것은 소련의 대북한 경제 원조가 급격히 감소한 것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1985년 9,600만弗이던 대북한 경제 원조가 1987년에 6,200만弗로 감소하였고, 이보다 1985년의 불변가치로 환산한다면 2,400만弗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그것은 무려 75%라는 급격한 감소였다(표 3).

〈표 3〉에서 보듯이 북한에 대한 소련의 경제 원조 실적은 다른 제3세계 사회

12) *Pravda*, October 27, 1986, p. 2.

13)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SIPRI Yearbook 1989: World Armaments and Disarmament*(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89), pp. 256-257.

〈표 3〉 소련의 제 3 세계 사회주의 우방국에 대한 원조액<sup>14)</sup>

(단위 : mil. \$)

국 가 명	1985	1986	1987	1986*	1987*
북 한	69	123	62	101	24
쿠 바	655	532	656	383	400
몽 골 리 아	550	706	804	581	588
베 트 남	1,056	1,457	1,811	1,217	1,397
아 프 가 니 스 탄	219	283	200	233	114
캄 부 제 아	98	150	161	128	123
다 오 스	99	81	110	58	71
원 조 총 액**	3,664	4,600	4,961	3,767	3,525

\* 1985년 가격 및 환율 기준으로 재환산.

\*\* 모든 제 3 세계 국가들에게 제공한 경제 원조 총액.

주의 국가들에 대한 실적들과 비교하면 한가지 흥미있는 점이 발견된다. 1985년과 1987년 사이에 소련이 제 3 세계의 사회주의 우방 국가들에게 제공한 원조액 총액은(1985년 가치로 비교할 때) 약간의 감소만 있었을 뿐이다. 그리고 위의 표에 나타나 있는 소련의 제 3 세계 사회주의 우방 국가들 가운데에서도 몽골리아, 베트남, 캄푸체아와 같은 국가들에 대한 경제 원조는, 북한의 경우와는 반대로, 같은 기간 동안 오히려 증가되었다. 그리고 쿠바, 아프가니스탄, 라오스에 대한 경제 원조는, 북한의 경우와 같이, 감소되기는 하였으나 그 감소량은 그리 크지 않았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75%에 달하는 북한에 대한 경제 원조 삭감은 분명히 예외적인 현상이었다. 소련 당국은 이에 대한 공식적인 해명을 제시하지 않았다.

순전히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볼 때는, 이는 소련 자체의 경제 사정 악화로 인한 불가피한 원조 삭감이라고도 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그러한 해석은 북한의 예외적인 삭감 규모를 적절히 설명하지 못한다. 따라서 북한의 경우는 경제외적인, 일종의 정치적인 고려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가령, 북한으로 하여금 동북 아시아의 새로운 국제 질서 형성에 부합하는 체제 변혁을 하도록 간접적인 압력을 가하기 위한 조치일 수가 있다. 즉, 경제 원조를 대폭 삭감함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소련에 대한 의존을 버리고 대외 개방

14) 출처 :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1988 Report), Paris, December 1988  
Giovanni Graziani, *Gorbachev's Economic Strategy in the Third World* (New York: Praeger, 1990), p.21에서 再引用.

혹은 지역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을 확대하며, 더 나아가서 북한의 경제적인 경제 윤희 자재를 개혁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할 수 있다.

사실 경제 원조의 대폭적인 삭감이 이루어지던 1987년, 북한에 관한 소련 정부의 정책 변화 혹은 소련 사회의 북한에 대한 인식 변화를 예고하는 새로운 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실마리는 북한 체제의 특정한 측면에 대한 비판적 기사들이 1987년 봄부터 간헐적으로 소련 언론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종래 북한에 대하여 찬양 일변도의 보도만을 해온 소련 언론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현상이었다. 예를 들어 1987년 4월 14일字 *Pravda*는 북한 인민들의 엄청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 경제가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음을 다음과 같이 지시하였다.

[북한 경제에서는] 많은 것이 이루어졌으나 앞으로 더 많은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직 많은 이해관계의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 광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하여 공업 생산을 위한 원자재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전력 생산이 가동하여 국가 경제의 완전한 윤희에 필요한 수준의 전력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수송 체계 또한 개선해야 하고 농업도 상당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부분으로 남아 있다.<sup>15)</sup>

이후에도 소련의 주요 언론 대채에서는 북한 체제의 부정적 측면에 관한 비판적 기사들이 빈번하지는 않으나 가끔씩 나타났다. 10월 7일字 *Pravda*에서는 북한의 식량 시장을 비판적으로 보도하였고,<sup>16)</sup> 12월 27일字 *Izvestiya*는 북한의 비효율적인 경제 체제, 선재주의적 주민 통제, 그리고 金日成 우상화 정책을 스탈린 시대의 개인 숭배에 비유하여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광범위한 체제 비판 기사를 게재하였다.<sup>17)</sup> 이러한 경향들은 1988년에 들어서 그 빈도와 비판의 논조가 좀 더 강해지기 시작하였다. 3월 10일字 *Ekonomicheskaya Gazeta*紙는 경제학자 V.모이세예프(Moiseyev)가 쓴 사실에서 소련-북한간의 경제 협력 체제가 지극히 비효율적이고 그 결실 또한 실망스러운 상태임을 구체적인 예들을 들어 지시하였다.<sup>18)</sup>

이와 함께 양국 관계 역시 마찰과 갈등의 조짐들이 1987년 말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가령 1987년 11월 소련의 평양주재 대사관 아무런 설명없이 교체

15) *Pravda*, 1987년 4월 14일字, p.4.

16) *Pravda*, 1987년 10월 7일字, p.5.

17) *Izvestiya*, 1987년 12월 27일字, p.5.

18) *Ekonomicheskaya Gazeta*, no.11, 1988년 3월 10일字, p.23.

할 것이라면서, 1988년 4월 북한외 의상 金永南이 모스크바를 방문하였을 때 “사부직”인 분위기에서 회담이 진행되었다는 소련 당국의 설명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sup>19)</sup> 양국 관계에 있어서 그러한 갈등의 징후들은 1988년 여름에 들어서서 코르비초프가 [크라스노야르스크 연설]에서 한국과의 관계 개선 의식을 보다 구체적으로 천명한 것과 소련이 서울 올림픽에 참가한 것을 기점으로 보다 표면화되기 시작하였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그해 12월 당시 소련 외상 셰바르드나제(Shevardnadze)가 북한을 방문하였을 때 나타났다. 양국 대표단은 여러 차례의 회담에서 경제 협력에 관한 문제로 상당한 마찰을 노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의 방문을 보도한 TASS통신 기사에 포함된 다음과 같은 구절이 당시 양국 관계에 있어서의 갈등과 마찰의 성격을 잘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소련과 북한의 양국 관계의 제된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었다. …셰바르드나제와 金日成은 모든 현안에 관하여 솔직하고, 동지적이며, 사무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소련-북한간의 우호 관계를 지속시키는 데에 필수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의견의 일치점을 보였다.<sup>20)</sup>

북한 셰바르드나제는 북한 지도층에 대하여 통일 문제에 관하여 “일관하는 원칙을 충분히 고려하여” 보다 실현성있고 비공조적인 노선을 택하도록 인공한 표현의 충고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21)</sup> 즉, 한국의 실재를 인정하고 혁명시향식 통일 정책을 포기하고 평화 공존을 믿어들이는 노선으로 수정하라는 암시였다.

셰바르드나제의 1988년 12월 북한 방문 이후 1989년 한해 동안은 소련 언론 매체들에서 나타나는 북한 기사들이 그 빈도가 눈에 띄게 감소하는 면화를 보였다.<sup>22)</sup> 그러나, 게재되는 북한 기사의 내용들은 오히려 더욱 적실적이고 비판적인 경향을 띠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북한에 관한 보다 객관적인 보도 경향은 *Pravda*나 *Izvestiya*, 그리고 Moscow 국제 방송 등 주요 언론 매체들 초월하여 보다 광범위하게 확대되는 양상을 띠게 되었다. 그리고 1990년에 들어서면 시 이러한 경향은 언론계를 넘어서 학계로까지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

19) *Pravda*, 1988년 4월 30일자, p.4.

20) TASS, 1988년 12월 23일, FBIS SOV-88 084, p.21에서 再引用.

21) *Ibid.*, p.12.

22) 평양발 기사의 숫적 감소는, 당시 평양주재 TASS통신 기자였던 A.레빈(Levin)에 의하면, 북한 남쪽이 셰바르드나제의 북한 방문 이후 소련기자들의 경제활동에 일찍이 통제하기 시작하였던 것에 기인하였다. Moscow 국제 방송(한국어), 1990년 4월 28일, FBIS SOV-90 084, pp.24-25에서 再引用.

다. 몇몇 역사학자들은 소련 언론 매체에서의 더복한 인식 변화 경향에 가세하여, 지금까지 소련에서의 한반도 현대사 기술이 일방적으로 북한의 선전적 자료들만, 그것도 부비판적으로 받아들였던 과거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L. 말레친(Mlechin) 같은 사람은 한국전쟁의 전개 과정에 관한 소련 내의 역사 기술을 대표적인 역사 왜곡의 예로서 제시하면서, 지금부터라도 정치적 이유로 왜곡되어 온 북한에 관한 역사적 인구를 다시 객관성에 바탕을 두고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그는 소련 정부에 대하여 두마니아의 경우를 교훈으로 삼아서 인민의 저항으로 붕괴할지 모르는 북한 정권에 대한 소련정부의 지지정책을 지남이라도 시정해야 한다고 다음과 같이 충고하였다.

[북한 정권이 붕괴하는 경우] 예상되는 충격을 최대한 감소시키기 위해서, 학자들과 언론인들은 [북한에 대한 점령에 있어서]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북한의 과거의 편견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묘사하여야 한다. 그리고 소련의 외교관들은 그것은 [소련의 국익에 반하는 것으로] 나쁘게 생각해서는 안된다. 모스크바 당국은 지금 북한 남쪽에 대하여 귀에 기울이는 봉고를 하는 것을 중지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상호 동맹된 한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 지금까지 소련 남국은 북한 신부를 자극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소련의 언론 보도들은 북한의 내부 상황을 장미빛으로만 쳐다봐 왔다. ... 두마니아의 치우체스쿠 정권이 붕괴된 지금 두마니아 국민들 사이에 反蘇 심정이 높은 이유를 대북한 정책에서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그것은 그간 소련이 치우체스쿠에게 세운 온정을 여러 차례 수여하는등 치우체스쿠 정권을 지원해 왔기 때문인 것을 알아야 한다.<sup>23)</sup>

북한에 관한 보다 구체적이고 강한 논조의 비판성 보도가 소련의 언론 매체들에서 증가되면서 또한 비판의 영역 또한 확대되었다. 경제 정책의 실패나 김일성 개인 우상화에 대한 비판 뿐만 아니라 그동안 소련이 거의 기계적으로 지지해 왔던 북한의 통일 정책 또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정치 군사적 측면의 타협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북한의 남북 대화 정책이 비현실적이며, 오히려 비정치적영역에서의 교류 증진을 시작으로 신뢰 구축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내용적으로 한국의 통일 정책에 보다 가까운, 노선이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라는 지적도 있었다.<sup>24)</sup> 북한의 통일 정책과 함께 소련의 언론에서 새로운 논란의 대상이 된 것은 북한의 인권 상황이었다. *Novoe Vremya*에 게재된 한 논문은 현재 북한에는 100,000명이 넘는 정치범이 여러 집단 수용소에 분산되어 있는 실정

23) *New Times*, no. 10, March 6-12, 1990, pp. 19-21.

24) Moscow 국제 방송 (한국어), 1990년 4월 28일, FBIS-SOV-90-084, pp. 23-24.

이라는 국제 사면 위원회의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이제 소련이 스달린 체제로부터 탈피한 이상 그러한 체제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하고, 소련-북한 관계의 근본적인 전환을 주장하였다.<sup>25)</sup>

역사학자들의 북한에 관한 수정주의적 역사 연구는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정부 문서등의 사료들이 글라스노스트와 더불어 학자들에게 공개되면서 활발해졌다. 역사학자 G.플라트니코프(Platnikov)는 북한 정권 수립을 전후한 역사적 상황을 묘사하면서, 한반도 북부의 해방은 전적으로 소련 군대의 힘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는 북한 정부가 지금까지 정권의 정당성 확립 차원에서 강조하여 온 한가지 중요한 역사 해석을 정면으로 부정하였다. 즉, 한반도의 해방은 오로지 金日成의 항일 무장 투쟁의 결실이며 특히 金日成이 지휘하는 군대가 반주와 북한의 일본 군대를 무찌르고 북한에 입성함으로써 북한의 해방이 이루어졌다는 북한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티구나 그는 북한 당국이 金日成의 독립 운동을 지나치게 과장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 하였다.<sup>26)</sup>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소련 역사학자의 발표는 M.스미르노프(Smirnov)의 한국전쟁 발발에 관한 새로운 해석이다. 소련은 종래에 한국전쟁의 발발에 관하여 미국의 사주를 받은 남한이 북침을 함으로써 시작된 것이라는, 북한의 주장을 두둔하는 입장을 취해 왔다. 이에 비해 스미르노프는 새로운 자료들을 인용하여 한국전쟁은 북한에 의하여 개시된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새로운 단정을 내렸다. 그리고 그는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소련 정부가 그러한 왜곡된 역사를 소련 사회와 학계에 강요해 온 것을 통렬히 비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소련의 역사학계 역시 이데올로기에 지배되어 북한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들을 정확히 인식하려는 노력을 결여했던 점에 대한 자성을 촉구했다.<sup>27)</sup>

역사학자들과 함께 소련의 일부 경제학자들도 북한의 경제 발전 수준이라든지 소련의 경제 협력 파트너로서의 북한의 가치 등에 관하여 종래와는 다른 연구 결과들을 제시하여 북한에 관한 새로운 인식을 소련 사회와 학계에 형성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종래 북한의 경제를 분석하는 소련 경제학자들의 연구는 북한

25) *Novoe Vremya*, 1990년 6월 23일부, FBIS-SOV-90-122, p. 22에서 再引用.

26) Moscow 국제 방송 (한국어), 1990년 3월 20일, FBIS-SOV-90-059, pp. 17-19에서 再引用.

27) Moscow 국제 방송 (한국어), 1990년 4월 21일, FBIS-SOV-90-078, pp. 24-25에서 再引用.

이 사회주의 원리에 입각하여 광복할만한 발전을 이루었다는 것이 주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찬양 일변도의 북한 경제분은 이제 자취를 감추고, 보다 실증적인 연구들 통하여 북한 경제의 분세집들이 구체적으로 분석되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인 예로서 N.바하노바(Bahanova)와 같은 경제학자는 북한과의 경제 협력은 소련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음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면서 근본적인 수정을 주장하였다.

...이제 우리는 [북한을 평가하는 데에 있어서] 솔직해야 한다. 무역과 경제 협력 상대로서 북한은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소련에게 공급하여야 할 물자들을 공급하지 못함으로써 북한은 현재 소련에 대하여 심각한 무역 적자를 겪고 있는 데로 이다. 소련은 또한 북한의 부채 지불을 연기해야 하지만 심지어 퇴짜시키는 조처를 취하기도 하였다. ... 북한에 대한 소련의 기술 원조 또한 어떤 현대적인 수준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았다: 거의 60%에 달하는 원조가 발전과 전장 산업에 집중 투입되었고, 약 10%가 기계 생산, 그리고 약 3%만이 경공업에 투입되었다. 따라서 소련-북한 간의 경제 협력은 지금까지 인민의 생활 수준과 복지의 향상이라는 사회주의의 주요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집중되지 못했다. 더구나 막대한 소련의 도움에 북한 인민들이 충분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다. 실제로 북한은 소련과의 무역과 경제 협력 과정에서 끊임없는 불만을 드러내 왔다.<sup>28)</sup>

### 3. 소련 정부의 북한 정책 변화

소련 언론 대체의 북한 보도 내용의 변화와 학계의 북한 관련 연구 경향의 변화가 어느정도 진행된 후 소련 정부 차원의 정책 변화 양상이 1990년 후반기부터 점진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선택적으로 보면 그 분수령은 1990년 6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있었던 고르바초프-노태우 정상 회담으로 잡을 수 있다. 소련과 한국과의 관계 개선 수준이 비정부적 영역에서 점차 정부적 차원으로 공식화됨에 따라, 소련 정부는 북한에 대한 변화된 입장의 표명을 점차 구체화하기 시작하였다.

이미 「블라디보스톡 연설」과 「크라스노야르스크 연설」 그리고 그 후 정부 고위 인사들의 발언에서 이미 소련은 한반도에서의 안정과 평화 정착을 희망하며, 따라서 북한이 추구하는 혁명 지향적 혹은 민족 해방적 통일 노선에 반대한다는 뜻을 사실상 공표해 왔다. 그리고 고르바초프가 구상하는 새로운 동북 아시아 국제 질서의 내용을 생각하면 그러한 구도에 부합하는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소련이 원하는 것은 명일하다고 할 수 있다. 즉, 내부적으로는 고조주의적인

28) *Pravda*, 1990년 8월 6일자, p.5.

스탈린 체제를 탈피하고 대외적으로는 적극적인 대외 개방으로 지역 국가들과 교류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서 지역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방향으로의 북한의 변화를 소련은 희망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련은 북한의 그러한 정책 노선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소련이 가지고 있는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정책 변화의 압력을 구체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자제해 왔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북한의 정책은 북한 스스로 결정할 문제이며, 소련은 주권 국가에 대한 내정 간섭을 할 의사가 없음을 여러차례 표명하였다. 한 대표적인 예로서, 샌프란시스코 정상 회담에서 고르바초프가 북한의 개방을 위하여 소련이 적극적으로 압력을 행사하기로 노태우 대통령에게 약속하였다는 보도에 대하여, 고르바초프의 한 측근은 소련이 주권 국가에 대한 내정 간섭에 반대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를 정면으로 부인하였다.<sup>29)</sup>

북한의 정책 변화를 위해서 소련은 직접적인 압력 행사가 아니라 간접적인 방법으로 그러한 변화를 「유도」하는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1987년에 실행한 75%에 달하는 대규모 경제 원조 감축도 그러한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은 앞서 지적한 바이다. 그러나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러한 정부 차원의 조치는 일과성의 사례에 불과했었으나, 1990년 후반기 부터 정부 차원의 유도성 정책들이 좀더 체계적인 지속성을 띠고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유도성 정책들은 따지고 보면 정부 차원의 공식 정책에서만 반견되는 것은 아니다. 따지고 보면 1988년 여름부터 소련의 언론 매체와 학계에서 시작된 북한에 관한 비판적 시각의 보도나 연구 경향 자체도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계산된 간접 개입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그러한 추정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현 정부가 정권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존하고 있는 역사적 「신화」들을 사료를 통해 벗겨내는 것은 북한 정부의 최대 약점을 노출시키게 됨으로써 북한에 대한 장차 정부 차원의 압력이 효과적으로 작용하게 하는 중요한 정치 작업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 소련 역사학자들이 그러한 수정주의적 연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과거에는 공개되지 않았던 정부 관리하의 문서들 사료들이 비로소 공개되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문서 공개는 적어도 정부의 결정없이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는 북한의

29) TASS, 1990년 6월 11일과 Moscow 국제 방송 (영어), 1990년 6월 8일. FBIS-SOV-90-114, pp. 16-117에서 再引用.



정책 변화라는 궁극적 목표를 겨냥한 소련 정부의 개선된 결정권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다. 더구나, 그러한 문서의 공개가 다분히 부분적이고 선택적이 라는 점이 소련 정부의 개입 가능성을 더욱 신게 하고 있다. 북한 체제에 관한 보다 민감한 문제와 관련된 문서들은 여전히 공개되지 않은 채, 극히 일부분의 문제에 관한 문서들만 적당히 공개될 것 또한 정부 차원의 조절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는 소련 정부가 역사학자들에게 북한과 관련된 새로운 자료들을 공개함으로써 그러한 수정주의적 연구들을 장려할 움직임이 강하다는 것이다.

역사학계의 연구들 뿐만 아니라 소련의 언론 매체들의 비판성 또한 보도 성향에서도 소련 정부의 개입 흔적을 찾아 볼 수 있다. 과거와는 다른 그러한 보도 경향 자체는 전체적으로 보아서 글라스노스트 이후 점진 제도의 대폭적인 완화 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기 볼 때는 북한에 관한 소련 언론의 새로운 보도 성향이 소련 정부의 북한 성개과 관련하여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이 러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보도에 관한 한 한가지 주목할 만한 양상 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소련의 언론 매체 가운데 북한에 관한 새로운 시각의 보도를 주도한 매체들은 글라스노스트 이후 새로이 발생한 언론 매체들이라든지 아니면 특별히 개혁 지향적 색채가 뚜렷한 이른바 진보적 매체들이 아니라, 정부나 당의 기관지로서 아직 정부의 통제를 상당히 받고 있는 *Pravda*나 *Izvestiya*, 혹은 Moscow 국제 방송 등이었다는 점 이다. 따라서 북한에 관한 새로운 인식이 소련 사회에 형성되도록 정부가 어느 정도 조장 내지는 방조하였음을 의심할 수 있다. 또한 Moscow 국제 방송에서 나온 북한에 관한 비판적 보도들은 다름아닌 한국어 방송이었다. 그것은 북한 인민들을 포함한 한국인들을 청취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관 한 인민들에게 북한 체제의 문제점을 인식하게 하여 북한 사회 내부에 체제 개 혁의 요구를 형성한다는 정치적 목적을 내포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볼 때, 소련 정부의 개입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할 수 있다.

소련 정부가 북한의 정치 변화 혹은 체제 개혁을 유도하기 위한 간접적인 압력 수단으로서 북한과 관련된 역사적 자료를 선택적으로 공개한다는지 정부 통치하 에 있는 언론 매체의 보도 성향을 비후에서 조정했을 가능성에 덧붙여, 정부 차원의 공식 정거를 통하여 북한의 정치 변화를 유도하 운면 또한 1990년 중반 기부더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대표적인 예는 무역 정거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1990년 4월, 평양에서 개최된 제24차 「소련—북한 정부간 경제, 과학, 기술 협력 위원회」 회의에서 소련측의 요구에 따라 양국은 한가지 획기적인 사항에 합의하였다. 그것은 1991년부터 양측의 무역을 완전히 국제 시장 가격에 따라 교환이 있는 경화로 결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것은 종래 양국 간의 무역이 물물교환이나 분업 생산 체제 위주로 이루어져 온 관행에 종지부를 찍는 일대 혁신적인 정책 전환이었다. 소련이 이러한 전환을 요구하면서 표면적으로 제시한 이유는 순수히 경제적 이유였고 실제로 그러한 경제적 이유에는 충분한 근거가 있었다. 무엇보다도 북한은 그간 물물교환과 분업 생산 과정에서 소련에 대하여 상당한 부채를 지게 되었다. 그것은 소련에서 수입한 물품의 댓가로 소련에 보내기로 되어 있는 물품들을 약속대로 보내지 못한 것이 누적된 결과였다. 이는 우선 소련에 대한 북한의 누적된 부채를 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소련—북한 간의 분업 생산 체제에서 소련측의 생산 일정에 막대한 차질을 야기해 온 것이 사실이었다. 따라서 소련의 입장에서 볼 때 북한으로부터 물품의 납품을 기다리는 대신 국제 시장 가격에 따라 경화로 결제받게 되면, 그 경화로 국제 시장에서 필요한 상품을 언제든지 구입할 수 있으므로 훨씬 효율적인 거래가 되는 것이다. 당시 소련측 회담 대표의 한 사람이었던 A.트로피모프(Trofimov)는 다음과 같이 그 사정을 표현하였다.

소련에 대한 북한의 부채가 무엇보다도 가장 복잡한 문제이다. ... 우리는 북한의 부채가 국제 시장 가격에 따라 경화로 다시 전민적으로 계산되어야 한다는 데에 합의했다. 앞으로의 경제 교역도 국제 시장 가격으로 경화 결제를 한다면 그러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sup>30)</sup>

소련의 대북한 무역 정책의 전환이 그러한 경제적 이유로 인하여 이루어졌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의 효과가 바로 그러한 경제적 문제의 해결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부수적으로 소련이 희망하는 북한의 전반적인 체제 개혁을 유도하는 간접적인 압력으로 작용할 소지가 많다. 북한의 엄청난 대소 경제적 의존도를 생각한다면, 국제 시장 가격에 입각한 경화 결제는 북한에게 극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미 북한은 심각한 외화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데이기 때문에 50% 이상에 달하는 대소 수입 의존도를 고려하면 소련으로부터의 수입을 모두 경화

30) Moscow 국제 방갈 (한국어), 1990년 11월 14일. FBIS-SOV-90-225, p.12에서 반引用.

로 결제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지금까지 소련은 북한에 대한 수출 물량에 대하여 국제 시장 가격에 훨씬 미달하는 소위 “우호적 가격”으로 제공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소련에 대하여 약 66%에 달하는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소련으로부터의 수입 물품의 가격이 국제 시장 가격으로 현실화된 경우 무역 적자는 엄청난 폭으로 증가될 것이고, 이것은 앞서 지적한 외환 부족 문제 또한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셋째, 소련으로부터 북한이 수입하는 물품이 소비재나 사치품 등이 아니라 북한 산업의 운영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석유나 기계류 등 산업 설비임을 고려한다면, 소련으로부터의 수입을 대폭 감소하는 것도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이미 북한의 산업 시설이 소련 체제로 건설되어 있기 때문에 기계 설비등의 수입선을 하루아침에 대체하기도 어렵다.

이러한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소련의 대북한 무역정책의 전환은 북한에게 단순히 대소 무역의 차원을 초월한, 종체적인 경제적 위기를 야기할 것이 분명하다. 북한으로서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경제 운영의 근본적인 개혁일 수 밖에 없고, 그것은 소련이 희망하는 바와 같이 폐쇄적 자금 체계를 청산하고 대외 개방을 확대하여 지역 국가들과의 교류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소련의 대북한 무역 정책의 전환은 표면적으로는 순수하게 무역 문제의 시정을 위해 이루어졌지만, 이러한 파급 효과를 고려하면 그것이 북한의 정책 변화를 유도하는 간접적인, 그러나 강력한 압력 수단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정책 변화를 위한 소련 정부의 보다 직접적인 영향력 행사 시도는 1990년 9월에 있었던 도.세바르드나제의 평양 방문에서 발견된다. 그 방문의 주목적은 북한 당국에게 소련이 조만간 한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할 예정임을 통고하고 북한에게 새로운 국제 정치 조류에 합류하도록 체제 개혁을 설득하기 위한 것이었다. 북한은 소련과 한국의 국교 수립이 “두개의 조선”을 인정하고 분단을 고착시킨다고 주장하여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았고, 따라서 방문 기간 동안 그가 북한의 고위급 지도자들과 가졌던 여러 차례의 회담들은 첨예한 대립으로 점철되어 결국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설득하는 데에는 실패한 것으로 보였다. 단지 그는 “소련은 주권 국가로서 독립적인 판단에 따라 외교 정책을 결정할 따름이며, 소련이 서울에 대사관을 개설하는 문제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북한의 허락은 필요없다”<sup>31)</sup>는 결론을 남긴 채 북한을 떠났다.

31) *Izvestiya*, 1990년 9월 12일지, p.5.

그러나 그의 북한 방문은 당시 소련-북한 관계의 전체적인 변화 맥락에서 볼 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의 1989년 12월 평양 방문에서도 어느정도 원폭하게 그렸던 것처럼, 이번 방문에서 소련 정부는 제바르프나제를 통하여 분명하게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촉구하는 정치적 압력을 행사했다. 비록 그러한 직접적인 압력이 즉각적인 결실을 맺지는 못했지만, 일련의 간접적인 유도성 정책 이후 비로소 직접적인 요구를 북한 당국에 제시했다는 의미를 가진다.

북한에 대한 소련의 압력이 점차 구체화되면서 소련-북한 관계가 여러 영역에 걸쳐서 감도가 점차 증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양국 간의 협조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것은 아니다. 특히 군사적 영역에서는 여전히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여전히 공고한 양국 간의 군사적 유대는 특히 다음의 네가지 영역에서 발견된다. 첫째, 소련은 최근까지도 북한에 대하여 첨단 수준의 고성능 진술 무기를 공급하여 온 기록을 가지고 있다. 1988년 한해만 하더라도 30대의 Mig-29기, 18대의 Su-25기, 240기의 Scud-B 미사일, 240기의 AA-7 미사일, 720기의 AA-8 미사일을 제공하였다.<sup>32)</sup> 그런데 그러한 다량의 고성능 병기들이 1988년이라는 해에 제공된 사실은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앞서 논의된 바대로 소련은 이미 1987년부터 북한에 대한 경제 원조를 대수 감소하였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988년에 그러한 수준의 무기 제공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소련이 적어도 소련-북한 간 군사적 측면의 유대에는 다른 모든 측면의 양국 관계와는 어느정도 분리하여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둘째, 양국은 또한 해군 간에 긴밀한 작전 협조 체제를 구축해 오고 있다. 소련의 내평양 함대는 빈번한 주기로 북한의 원산, 청진, 남포 등 주요 해안 기지를 방문하고 있고, 북한 역시 소련 태평양 함대의 주요 거점인 칼라니노스도항에 함대를 파견하고 있다. 그러한 빈도는 양국 관계가 최근 다른 영역에서 전체적으로 약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점이 특히 주목을 끈다. 또한 1986년 이후 양국 해군은 동해상에서 매년 함동훈련을 개최하여 해군 차원에서 긴밀한 작전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셋째, 양국은 군내 내에서 주류 이념 부장을 담당하고 당과 군부들 연계하는 군부 내의 공산당 조직인 「군 정치국」(GPB 혹은 MPA) 간에 긴밀한 협조 체제를 형성하고 있다. 양국 간에 교환하는 군사 대표단 중 가장 많은 필도가

32) SIPRI Yearbook 1989, op. cit., pp.256-257.

바로 이 「군 정칙국! 대표단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양국의 군사적 유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주보 군대 조직과 당에 의한 군부 통제 유지에 관한 정보와 기술을 북한은 이 조직 간의 잦은 대표단 교환으로 소련으로부터 습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네째, 양국 군부 간의 긴밀한 유대는 북한의 입장에 대한 소련 군부의 절대적인 지지 표명에서도 나타난다. 많은 민간 학자들이나 언론인들이 1988년 중반기 이후부터 북한의 통일 정책을 비현실적인 것으로 비판적인 견해를 표명하기 시작한 이후에도, 소련 군부의 기관지인 *Krasnaya zvezda*의 기사들은 여전히 한반도 문제에 관하여 북한의 입장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과거부터 소련의 모든 언론 매체들 가운데에서도 *Krasnaya zvezda*紙는 한반도 문제에 관한 한 북한의 입장에 가장 적극적이며 기계적인 지지를 표명해 온 전통을 가지고 있다. 특히 미군의 남한 철수, 한반도의 비핵지대화, 톱스퍼리트 훈련 중단 등에 관한 북한의 요구를 거의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가장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해 온 것이다. 다른 소련의 많은 주요 언론매체들이 그러한 문제들을 다루는 데에 있어서 보다 객관적인 접근을 하기 시작한 최근에도 *Krasnaya zvezda*는 전혀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는 데에서 소련 군부의 북한에 대한 변함없는 유대 의식을 암시하고 있다.

### Ⅲ. 결론 : 소련의 대북한 영향력 행사 양상(pattern)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북한은 소련에 거의 절대적인 의존도를 갖고 있고, 따라서 소련은 북한의 정책 변화를 위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객관적 기반을 가지고 있음은 앞서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소련이 동북 아시아에서 새로운 협조적인 국제 질서를 형성함에 있어서 그 중요 관건인 한반도의 안정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도 앞서 검토하였다. 따라서 소련은 그러한 동북 아시아 정책에 부합하는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희망하고 있음을 셰바르드나제를 비롯한 소련의 고위 외교 정책 지도자들의 발언에서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소련은 고르바초프 집권 이후 지금까지 소련이 갖고 있는 영향력을 어떠한 양상으로 행사하여 북한의 개방과 개혁을 유도하여 왔는가를 이 논문의 결론으로서 정리해보고자 한다.

소련은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영향력을 동원하여 북한의 정책 변화를 직접적으

로 강요하는 것을 피해 왔다. 소련 관리들은 여러차례에 걸쳐 북한의 변화에 대한 소련의 역할과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소련은 북한에서도 「레스트로이카」가 일어나기를 희망한다고는 하면서도, 그것은 결국 북한 스스로 선택할 문제인 만큼 소련이 주권 국가인 북한에 대한 내정 간섭은 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였다. 그것은 북한의 정세 변화를 강요하지 않겠다는 소련의 공식적인 의사 표현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고 소련이 북한에 관하여 완전히 수수방관해 온 것은 또한 아니다. 고르바초프 이후 소련-북한 관계의 변화 양상을 살펴볼 때, 소련은 점진적으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보인다. 첫번째 유도성 정책은 1987년부터 시작된 경제 원조의 대폭 감축 조치였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소련의 국내 경제 사정의 악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조치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표 3>에서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왜 유독 북한만이 75%에 달하는 과격적인 원조 감축을 당했는가? 라는 의문을 해결하지는 못한다. 그렇다면 그것은 소련의 제3세계 사회주의 우방국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교조주의적인 폐쇄 체제를 고집하고 있는 북한에 대하여 개혁을 유도하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취한 조치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소련이 제3세계 지역 가운데 자신의 입지 전환을 위해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동북 아시아 지역에 위치한 북한의 개방은 그만큼 특별한 중요성을 띠기 때문이기도 하다. 즉, 북한으로 하여금 소련의 원조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그 대신 주변의 지역국가들 외부에 대한 개방 확대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끔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 후 1988년부터 소련-한국 간의 관계 개선이 본격화 되면서 소련 당국은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보다 체계적인 일련의 정책들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밀차적으로 정부가 통제하고 있는 북한에 관한 자료들을 선택적으로 개방하여, 북한 정권의 정통성을 약화시키는 새로운 연구들을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아직 어느정도 정부 통제하에 있는 몇몇 언론 매체들의 주도로 파탄 상태의 경제 상황이라든지, 전체주의적 사회 통제, 전근대적인 개인 숭배 운동, 비민주적인 인권 상황 등 북한 체제의 부정적인 측면들을 보도하는 것을 방조 내지는 배후에서 강력히 장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조치들은 한편으로는 소련 사회 내에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켜 장차 정부 차원의 대북한 정책 변화가 쉽게 수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정지 작업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다

한 한편으로는 북한 사회에도 이러한 내용들이 전파되어서 북한에서 내부적으로 개혁과 개방의 요구가 형성되는 것을 기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분위기 형성이 어느정도 이루어지고 난 뒤, 소련은 정부적 차원의 정책을 통하여 북한의 변화에 영향을 주기 위한 보다 강도 높은, 그러나 여전히 간접적인 압력을 가하기 시작하였다. 그 중 대표적인 소치는 대북한 무역 정책의 변화이다. 종래의 물물교환과 분업 생산 위주의 경제 교류에서 탈피하여 1991년부터 소련은 북한에 대하여 소련 물품에 대한 국제 시장 가격의 할인 정책 시행을 요구한 것이다. 비록 형식적으로는 무역 정책의 변화에 불과하지만, 이것은 북한 경제가 더이상 소련의 도움에 의존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정책은 간접적으로 북한의 대내 개혁과 대외 개방을 야기할 수 있는 의미있는 조치였다. 이후에 북한이 일본과의 수교를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규모의 경제적 배상을 일본에게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바로 소련의 이러한 대북한 무역 정책의 전환이 거둔 한 긍정적인 목적, 즉 대외개방이 실현되고 있는 징후라고 볼 수 있다.

그러한 일련의 간접적인 영향력 행사 조치 이후, 1990년 9월에 있었던 세바르드나세의 북한 방문에서 소련은 북한에 대하여 비모소 체제 개혁을 직접적으로 요구하였던 것이다. 비록 당시 선략에는 실패했지만 소련이 북한 당국에 대하여 직접적인 체제 개혁의 압력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렇다고 소련이 북한과의 협조 관계를 전면 단절하고 소련이 북한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영향력을 동원하여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강요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여전히 부분적으로는 경제 원력을 계속하고 있고, 특히 군사적 영역에서의 협조 체계는 상당히 공고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소련은 앞으로도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유도」하는 성격의, 간접적인 영향력 행사 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즉, 북한과의 대화와 협조 채널은 어느정도 유지하는 가운데, 선택적인 정책 변화를 통하여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유도하는 정책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 **Soviet Influence upon North Korea: Potential and Practice**

by Hongchan Chun

This paper primarily aims at analyzing the potential of Moscow's policy leverage upon Pyongyang and how the Soviet government has exercised the potential in its North Korea policy since Gorbachev.

Moscow's influence potential is assessed in terms North Korean dependency upon the Soviet Union in areas such as economy, trade, and military, in these areas, this study finds, the two countries' bilateral relationship has been far from being an interdependent or balanced one; It was characterized by North Korea's unilateral, heavy dependency upon the Soviet Union.

Nonetheless, the Gorbachev government has refrained from exerting direct pressure upon North Korea for policy changes, even though it expressed its hope that a 'perestroika' would also take place there. Instead, the Soviets have employed a three-pronged strategy which combines both direct and indirect



pressures. First, they have evoked a new perception in Soviet society of North Korea by facilitating publications of revisionist journalists and historians. These reports also seemed to serve making the Pyongyang leadership pliant to Soviet demands. Alongside this, they have employed two types of governmental actions, "hard" and "soft" measures, to induce the desired systemic change in North Korea. Hard measures included, for example, Moscow's radical reduction of economic aid in 1987 and fundamental transformation of trade policy in 1990. Soft measures included diplomatic approaches to convince the North Korean leadership that reform was inevitable policy choice for North Korea in a new international order.